

2020년도 경찰간부후보생(제69기) 선발시험

2 교 시

- 객 관 식 (분야별 필수) -

목 차

<과 목(1)>	
【행 정 학】 (일반)	1
【형사소송법】 (세무회계, 사이버)	6
<과 목(2)>	
【경찰학개론】 (일반)	13
【세 법 개 론】 (세무회계)	19
【정보보호론】 (사이버)	24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해당 문번에 바르게 표기하여야 하고, 답안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테이프 등 사용이 불가하므로 답안지 교체 후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특성		경합성 여부	
		비경합성	경합성
배제성 여부	비배제성	가	나
	배제성	다	라

- ① 가 - 시장에서 공급할 경우 무임승차 문제나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② 나 -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로서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 ③ 다 -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 ④ 라 -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영역이다.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르디외(P.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 ②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③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를 말한다.
- ④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3. 윌슨(Wilson)은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ㄱ)~(ㄴ)에 들어갈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비용	집중	(ㄱ)	(ㄴ)
	분산	(ㄷ)	(ㄹ)

- 가. (ㄱ)은 쌍방이 막강한 정치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대립되는 경우로서 규제기관이 어느 한쪽에 장악될 가능성이 약하다.
- 나. (ㄱ)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가 해당된다.
- 다. (ㄴ)은 의제채택이 가장 어려우며 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위기 발생이나 운동가의 활동에 의하여 규제가 채택된다.
- 라. (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차별규제가 해당된다.
- 마. (ㄷ)은 조직화된 소수가 포획 등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다수를 압도·이용하는 미시적 절연이 발생한다.
- 바. (ㄹ)의 상황에서는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공익단체에 의해 먼저 제기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과다공급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 Musgrave의 조세저항 ② Downs의 합리적 무지
- ③ 보물병(Baumol's Disease) ④ Galbraith의 의존효과

5. 다음 중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규범적·실질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 ②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 ③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 ④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6.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 나. 접근방법의 범위가 넓고 경계는 느슨한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들어 있다.
- 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즉 정치 체제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제약한다.
- 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 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접근법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연역적 접근법이 사용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가. 덴하르트(J.Denhardt & R.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 나.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다.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 라.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아닌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으로 보고 있다.
- 마. 민주적 시민정신이나 공익과 같은 가치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가,나,다,마 ② 나,다,라 ③ 가,다,마 ④ 다,라,마

8.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나. 이념적·가설적 상황으로서 원초적 상태를 설정하였고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 다. 정의의 두 가지 기본원리 중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정 원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 라. 기회균등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을 중시하며 차등의 원리는 기회의 공평을 중시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외성은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 ② 란다우(M.Landau)는 권력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의 현상으로 보았다.
- ③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 ④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다.

10.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
-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 ① 구성정책 ② 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11.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② 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교환관계이다.
- ③ 헤클로(Hecl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④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12.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 ②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 ③ 포자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④ 동형화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13. 행정에서 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을 말한다.
- ② '소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말한다.
- ③ '적극적 대처방안'으로는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정책 텔파이, 정보의 충분한 획득 등이 해당되며, '소극적 대처방안'으로는 분기점분석, 민감도분석 등이 해당된다.
- ④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악조건 가중분석으로 소극적 대처방안에 해당한다.

14.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 나.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 다. 비가분적 정책(indivisible policies)에 대해서는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용이하다.
- 라.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을, 세부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 마.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결정 전략의 결정,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등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집단적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회사모형은 문제 중심적 탐색, 갈등의 완전한 해결, 표준운영 절차 중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 ② 쓰레기통모형은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이 용이하다.
- ③ 킹던(Kingdon)의 '흐름창(Policy Window) 모형'은 정책 창문이 한 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본다.
- ④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정책문제의 재규정,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선택 등의 대응행동을 보일 수 있다.

16.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협상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 ②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③ 정책결정자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자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 동의한다.
- ④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는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17. 다음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상실요소(experimental mortality)
- 나. 역사적 요소(history)
- 다. 성숙효과(maturation)
- 라.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 마. 오염효과(pollution)
- 바.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사.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
- 아.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
- 자. 표본의 대표성 부족
- 차. 측정(검사)요소(testing)

-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18.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①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 Adams의 공정성이론
 - ②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론 - Vroom의 기대이론
 - ③ Skinner의 강화이론 - Porter&Lawler의 업적만족이론
 - ④ Likert의 관리체제이론 - Hackman&Oldham의 직무특성이론

19. 동기이론의 하나인 '강화이론(학습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정간격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② 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지는 성과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스키너(Skinner)의 강화유형 중 '소거'에 해당한다.
- ③ 조직의 강화일정 중 초기단계의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연속적 강화'이다.
- ④ 변동비율 강화는 불규칙적 빈도 또는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20.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갈등관의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 ③ 토마스(Thomas)의 갈등관리방안 유형 중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의 중간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는 협동전략이다.
-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작다.

21.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론은 리더와 부하집단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② 상황론의 예로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이론),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모형(이론) 등을 들 수 있다.
- ③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 ④ 상황론은 리더십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22.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나.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

라. 유동적이고 모호한 조직경계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마.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

-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라 ④ 나, 다, 마

23. 다음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라.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① 가, 나 ② 다, 라 ③ 나, 다, 마 ④ 나, 다, 라

24. 거시조직이론 분류 중 임의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구조적 상황론
- ② 조직군 생태학이론
- ③ 전략적 선택이론
- ④ 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25.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질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② TQM은 상하 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 ③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26.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했다.
- ②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며 크랜츠(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 ③ 대표관료제의 한계로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통제 약화, 임용의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를 들 수 있다.
- ④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27. 고위공무원단체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② 행정부 전체에 걸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체도에는 업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 ④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28.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 ② 계급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직위분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 ③ 계급제는 인사권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과 융통성을 주어 리더십을 강화시켜준다.
- ④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 간의 수직적 이동이 곤란하다.

29.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금지된다.

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이루어진다.

- ① 가, 나, 라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30. 근무성적평정의 유형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정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범위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은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이다.
- ② 근접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을 들 수 있다.
- ③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 ④ 평정자마다 척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상이할 경우 평정상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31.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버넌스적 접근 - 부패란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시민간의 동등한 참여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체제론적 접근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③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며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 ④ 도덕적 접근 - 부패는 개인의 비도덕성과 같은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32.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이 소극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 ②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예산과 기획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 하였다.
- ③ 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 ④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명료성)의 원칙, 보고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3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 예산이란 경기 순환기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 세출규모의 변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 경제적 불황기 내지 공황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유효수요와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불황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① 자본예산 ② 잠정예산 ③ 조세지출예산 ④ 지출통제예산

34.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 ②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예산제도의 효용이 제약된다.
-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 ④ 영기준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집권화되어 있다.

35. 다음 중 (가), (나) 안에 들어갈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지방안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초과경비를 의미한다.

(나)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 | | |
|----------|--------|
| (가) | (나) |
| ① 수입대체경비 | 예산의 이체 |
| ② 수입대체경비 | 예산의 이월 |
| ③ 예비비 | 예산의 이체 |
| ④ 예비비 | 예산의 이월 |

36. 신성과주의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과관리를 위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사용한다.
- ② 과거의 성과주의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③ 성과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 측정·평가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④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성과주의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3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rnstein의 주민권력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 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로 예산심의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립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마
- ③ 가, 나, 라, 마 ④ 가, 나, 마

38.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 ②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 ③ 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 기관에 해당한다.

39. 다음 중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 ②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다.

40.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중 가장 나중에 도입된 것은?

- ① 주민투표제
- ② 주민소환제
- ③ 주민소송제
- ④ 조례제정개폐청구제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경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④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외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
2.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② 별건으로 구속된 자를 일정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검사실로 소환하여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물리적인 강압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의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해 동의할 수 있다.
 -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참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참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 ③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④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4.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계되는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반하지 않는다.
 - ③ 주취운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④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그 피의자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퇴거시킨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6.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전의 임의동행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시간이 지난 후 정상적인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그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다.
 - ③ 수사관이 임의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 ④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의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의자는 동행 당시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으며, 비록 술에 취하였으나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경우 동행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7.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옆에 앉지 말고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②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③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④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범죄인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의자신문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

8.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 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② 영상녹화에 있어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全)과정이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과정을 의미한다.
- ③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9.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 ②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 ③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는데,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하여도 공동으로 대표한다.
- ④ 소송행위의 방식에서 고소와 고발, 변호인의 선임, 상소의 포기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가 모두 적용된다.

10.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는 이상 단순히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 불과한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 ②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 ③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 ④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 보험법」 규정은 미결수용자에게 있어서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

1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 ②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④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영장에 기재된 인치·구금 장소로 호송하여 인치 또는 구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임의로 구금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12.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 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 마.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 ②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

④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14.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② 甲은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사법경찰관이 甲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방금 음주운전을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 ③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체포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적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
- ④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5.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압수·수색영장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 기재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지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사건 관련 차량으로부터 채취된 강판과 페인트를 피의자가 아닌 차량의 보관자가 임의제출하였는데 이를 감정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다.

마. 수사기관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 대한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甲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甲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甲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일반 사인에게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甲 소유의 쇠파이프를 甲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발견하였음에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그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甲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경우에만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7. 압수물의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의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④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18.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 ②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 ④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된다.

19.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의 재정신청은 사전에 검찰항고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라.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마. 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992. 2.경부터 1996. 6. 7.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한 경우, 밀수품취득죄의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 ②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 ③ 공소장의 기재사실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
- ④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사실도 특정하여야 한다.

21.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② 甲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甲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에서 후자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전자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된다.

22.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 ②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과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합의부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23.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하여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라. 증언거부권의 대상인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에는 증인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 때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조사를 하여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
-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2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나.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배심원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다.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마.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 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6.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 증거능력 인정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③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이나 시료채취 등을 할 수 있지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서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
 ④ 甲이 적법하게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된 후 검사가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8.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횡령죄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어진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라. 자백과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여 그 자백이 임의성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백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마. 검찰주사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그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9.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
 마.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0.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였으나,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의 녹취록의 기재가 위 각 녹음된 내용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을 뿐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된다면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다. 증거동의를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라. 변호인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제출한 증거 중 뇌물공여자가 작성한 고발장에 대하여는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같은 고발장을 첨부서류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를 철회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
 마. 증거동의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그리고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③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항소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동일한 증거라도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2.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甲의 필로폰 매수 행위와 실제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라.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범행에 사용된 노루발뿔뿔이와 손괴된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되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은 「형법」 제331조 제1항 (야간손괴침입절도)의 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판결 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에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뿐만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도 포함된다.
- ②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대해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것만을 설시하면 된다.
- ③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 ④ 피고인이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도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34.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그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 전부 이심되며 상고심으로서 그 무죄부분까지 나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수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고된 일부유죄, 일부무죄의 제1심법원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심리하여 위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피고사건의 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유죄 이외의 부분도 이심되므로 항소심은 공소기각 부분도 판단할 수 있다.

35. 상소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 ④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36. 항소 및 상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보아야 한다.
- ②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③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④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7.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②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38.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유·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을 선고·고지할 수 있다.
- 나.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법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다. 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라. 벌금 또는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마.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9. 배상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신청이 가능하다.
- ②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 ④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0. 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보상금지급청구권은 양도, 압류, 상속을 할 수 없다.
- ③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보상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의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1794년 「프로이센 일반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 ② 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6조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 ③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범규법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협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④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2.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 ②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갑오개혁 및 광무개혁 당시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년)과 「위경죄즉결례」(1885년)를 혼합하여 만든 「행정경찰장정」에서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
- 나. 광무개혁 당시인 1900년에는 중앙관청으로서 경부(警部)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였고, 이를 지휘하는 경부감독소를 두었다.

- 다. 1895년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정비하였고, 1896년 「지방경찰규칙」을 제정하여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라.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장으로 경무관을 둠), 한성부 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 마. 1900년 경부(警部) 신설 이후 잦은 대신 교체 등으로 문제가 많아 경무청이 경부의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 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 나.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 다.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 라.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 바,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이 조직의 숙원이었다.
- 마.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업무가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다.
- 바. 1969년 1월 7일 「경찰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서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 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 ②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 ④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7.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는 모두 몇 개인가?

- 가. 영리업무종사금지 의무
- 나.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의무
- 다. 품위유지 의무
- 라. 법령준수의 의무
- 마. 제복착용 의무
- 바. 집단행위금지 의무
- 사. 비밀엄수 의무
- 아.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의무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8.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私法人)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 ② 경찰이 경찰권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③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 ④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책임이다.

9.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나.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조치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 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구호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구호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행정기관 간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나.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 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 라.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마.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상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나.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 다.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 당시의 해당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한다.
- 라.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 마.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바.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② “경찰장구”란 무기,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③ 경찰청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④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3.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으로 구분할 때, 전통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집행
- ② 집행벌
- ③ 과징금
- ④ 강제징수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고,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 ②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5.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비밀의 관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대출부에 관련사항을 기록·유지한다.
- 나.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 다.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라.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 마.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열람 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바. 서약서철, 비밀접수증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다.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라.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마. 정정보도의 청구가 공익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비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가, 나, 마 ② 다, 마, 바
- ③ 라, 바 ④ 마, 바

17. 경찰통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 ② 경찰청의 감사관, 지방경찰청의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의 청문 감사관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는 협의의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제청권은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원리와 그에 대한 적용을 연결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적 감시 - 조정·가시권의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
-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출입구의 최소화,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③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울타리의 설치
- ④ 활동의 활성화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19.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기계경비업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나. 신변보호업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다. 특수경비업은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라. 혼잡경비업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① 가 ② 가, 나
-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2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각종 현황·통계·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 나.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 다.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로, 관내 중요 사건발생시 현장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 라.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 마. 「지역경찰관서」라 함은 「경찰법」 제17조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데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자
-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22.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가. 풍속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 연습장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주점영업을 하였다면,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

라.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마.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소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바.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경우,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공갈죄	나. 퇴거불응죄	다. 주거·신체 수색죄
라. 중손괴죄	마. 재물손괴죄	바. 중감금죄
사. 약취·유인죄	아. 특수감금죄	자. 아동학사죄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25.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등은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해당한다.
- ②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도 ‘컴퓨터 파괴행위’에 해당한다.
- ③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을 ‘프로그램 조작’이라 한다.
- ④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산출조작’이라 한다.

26.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한 후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비상호송이라 한다.

라.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호송이 항상 금지된다.

바. 금전·유가증권은 호송관에게 탁송하고, 물품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함이 원칙이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27. 재난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 재난관리 규칙」상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재난지역 주민대피 지원은 생활안전기능에서 수행한다.
-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28. 경찰의 대테러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의 대테러 부대인 KNP868은 대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983년 창설된 경찰특수부대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부대이다.
- ② 외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등이 있다.
- ③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B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29.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기간 중 근접배치 한다.
- 나. 대통령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을호 경호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의 다음날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
- 다. 제1선 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
- 라. 개표소 경비 제2선(올타리 내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한다.
- 마. 개표소 내부의 사전 안전점검 및 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시 및 병중사태 발생 시 경찰책임지역 내에서는 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경찰·군·예비군·관·민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지휘·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 ②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합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중사태에 해당한다.
- ③ 상황발생시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은 1순위로 직접 행동을 취할 기관 및 부대, 2순위로 지휘계통에 보고, 3순위로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4순위로 기타 필요한 기관 및 부대 순이다.
- ④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발령한다.

31.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와 결격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자 - 위반한 날부터 3년
- 나.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자 - 취소된 날부터 2년
- 다. 과로상태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취소된 날부터 5년
- 라.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2년
- 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1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②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③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④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3.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로 전제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 나.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음주측정용 불대는 1인 1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 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바.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4.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앞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③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행위를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④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할 수 없다.

3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있다.
-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에서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6.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실시한다.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충성심
- ② 성실성
- ③ 객관성
- ④ 신뢰성

3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 ④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38. 대공상황 발생 시 조치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출동조치 전에 군·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대공상황의 보고와 전파 시에는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보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③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개요를 보고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2보, 3보로 연속하여 보고한다.
- ④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분석판단 및 사건처리에 임한다.

39.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 ②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③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④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40.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 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하여야 한다.
- 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절차에서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도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 이하의 문항에서 「」로 표시한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은 법 조문의 내용과 함께 해당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임.

1.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함)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③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 ④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상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기간의 계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규정이 「민법」의 규정과 상충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④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②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 ③ 100만원 미만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 ④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에 성립한다.
 - ④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5.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② 선박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③ 현금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없다.
6.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을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
7. 「국세기본법」상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③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④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8. 「국세징수법」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자진 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제외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 ②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 된 때에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도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9. 「국세징수법」상 채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한 후 채납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채납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④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채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납처분을 한다.
10. 「법인세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②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11.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④ 사외에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12.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직원 및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도 손금에 포함한다.
 - ③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포함한다.
 - ④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유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금에 포함한다.
13.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접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접대비로 본다.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14. 「법인세법」상 귀속연도 및 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③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이다.
 - ④ 자산의 임대료 인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5. 상장법인인 (주)서울은 거주자 홍길동으로부터 2019. 10. 1.에 공장부지용으로 토지를 20억원에 매입하고 동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동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4억원이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15억원이다. 홍길동이 (주)서울의 비소액주주등인 경우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5억원(배당)
 - ② 손금산입 토지 6억원(△유보)
 - ③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5억원(배당)
손금산입 토지 5억원(△유보)
 - ④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6억원(배당)
손금산입 토지 6억원(△유보)
16.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④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7.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가. 이월익금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다. 감자차익
라.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마.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바. 자산의 양도금액 |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서울(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아님)의 제11기 사업연도(2019. 1. 1. ~ 2019. 12. 31.)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이다. (주)서울이 제11기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와 관련 해서 유보, 상여로 소득 처분할 금액은 각 얼마인가?

(1) 2019년 1월 1일에 임원 전용 업무용승용차*를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제11기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함)

(2) 제11기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
감가상각비	20,000,000원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

(3)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90%이다.

(4) 제11기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다.

(5) (주)서울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유 보	상 여
① 10,000,000원	2,400,000원
② 8,000,000원	2,000,000원
③ 8,000,000원	2,400,000원
④ 10,000,000원	2,000,000원

19.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 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②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④ 중간예납의무자는 내국법인(사립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등 일정한 법인 제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감면·세액공제를 승계한다.

④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을 손금에 산입한다.

2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표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
-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 ④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2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한다.
- ②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 ③ 납세조합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업무를 집행하는 납세조합 대표자의 주소지로 한다.
- ④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②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③ 예금의 이자
-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24. 「소득세법」상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은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을 감액한 경우 그 감액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 ④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5.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 ③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 ④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26.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소득세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③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8.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②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9.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데,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다.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④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포함)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30.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배당소득이나 파생결합사채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②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③ 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④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3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저유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이다.
 - ④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3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재화의 인도대가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③ 사업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영세율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③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34.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거주자 홍길동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2019. 1. 1. ~ 2019. 6.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 (1) 1월 10일 : (주)서울에 4월 6일에 판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상품을 1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2월 10일 : (주)부산에 현금 5,000,000원을 받고 토지를 매각하였다.
 (3) 3월 10일 : (주)대구에게 사업을 위하여 시가 100,000원(원가 60,000원) 상당의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4월 10일 :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를 6,000,000원(장부가액 4,000,000원)에 매각하였다.

- ① 1,500,000원
 ② 2,100,000원
 ③ 2,110,000원
 ④ 2,600,000원

35.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재화가 사용되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필요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서울은 2019. 11. 30.에 사업용 건물을 5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입하였다. (주)서울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과 매입가액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사업용 건물의 구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 (1)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은 1억원이고, 총공급가액은 5억원이다.
 (2)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은 2억원이고, 총공급가액은 5억원이다.
 (3)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은 5억원이고, 총공급가액은 10억원이다.
 (4)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은 3,000만원이고, 총매입가액은 5,000만원이다.

- ① 25,000,000원
 ② 30,000,000원
 ③ 50,000,000원
 ④ 70,000,000원

37.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또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④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3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② 일반과세자는 업종제한 없이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모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③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상속세와 증여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② 해외 소재 부동산도 물납이 가능하다.
 ③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제한 없이 물납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상속의 경우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하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 정보보호의 3대 목표 중 가용성(Availability)을 위협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 데이터 변조(Modification)
 -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 신분 위장(Masquerading)
 - 트래픽 분석(Traffic Analysis)
- 다음 중 수동적 공격(Passive Attack)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분산 서비스 거부(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세션 하이재킹(Session Hijacking)
 - 스머프 공격(Smurf Attack)
 - 스니핑(Sniffing)
-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RC5 암호 알고리즘은 64비트의 고정된 키 길이를 사용한다.
 - 3중 DES(Triple DES) 암호 알고리즘은 DES 암호 알고리즘을 개선한 것으로, DES에 비해 처리 속도가 3배 정도 빠르다.
 - IDEA 암호 알고리즘은 16라운드의 암호 방식을 적용하며,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달라 암호화 강도가 높다.
 - ARIA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와 블록의 길이는 AES와 동일하다.
-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5명이 서로 통신할 경우,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키의 개수가 다르다.
 - 일반적으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보다 암호화 속도가 빠르다.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로는 RSA, ECC, DSA 등이 있다.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인증과 부인 방지를 제공한다.
- SPN 구조와 Feistel 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SPN 구조는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이 동일하여 처리 속도가 빠르다.
 - SPN 구조의 종류에는 AES, SEED, BLOWFISH 등이 있다.
 - Feistel 구조의 암호 강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평문 블록의 길이, 키의 길이, 라운드의 수이다.
 - Feistel 구조는 역변환 함수에 제약이 있으며, S-BOX와 P-BOX를 사용한다.
- 블록 암호 운영모드 중 OFB(Output FeedBack)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암호기의 출력과 평문 블록을 XOR 연산하여 암호문 블록을 생성한다.
 - 암호문 블록 전송 도중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블록의 비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CBC(Cipher Block Chaining) 모드나 CFB(Cipher FeedBack) 모드와 마찬가지로 초기화 벡터(IV)를 사용한다.
 - 암호화와 복호화의 구조가 다르고,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 해시함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일방향 해시함수의 경우 입력되는 메시지의 길이가 다르더라도 출력되는 해시 값의 길이는 같다.
 - 해시함수의 보안 요구사항 중 강한 충돌 내성은 같은 해시 값을 갖는 두 개의 다른 입력 값을 발견하는 것이 계산상 불가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SHA-256의 블록 길이와 출력되는 해시 값의 길이는 256비트로 동일하다.
 - 해시함수에 대한 공격 중 하나인 생일 공격(Birthday Attack)은 일방향 해시함수의 강한 충돌 내성을 깨고자 하는 공격이다.
- 다음은 A와 B가 디피-헬만(Diffie-Hellman) 키 교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서로 공유할 키를 생성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바른 것은?
 - A는 소수 p와 p의 원시근 g를 선택하여 사전에 B와 공유한다.
 - A는 p보다 작은 양수 a를 선택하여 $K_A=(\text{㉠})$ 를 계산한다.
 - B도 p보다 작은 양수 b를 선택하여 $K_B=(\text{㉡})$ 를 계산한다.
 - A와 B가 서로 K_A 와 K_B 를 공유한다.
 - A가 $K_B^a \pmod p$, B가 $K_A^b \pmod p$ 를 계산하여 서로 (㉣)라는 공통의 키를 공유하게 된다.

- (1) A는 소수 p와 p의 원시근 g를 선택하여 사전에 B와 공유한다.
- (2) A는 p보다 작은 양수 a를 선택하여 $K_A=(\text{㉠})$ 를 계산한다.
- (3) B도 p보다 작은 양수 b를 선택하여 $K_B=(\text{㉡})$ 를 계산한다.
- (4) A와 B가 서로 K_A 와 K_B 를 공유한다.
- (5) A가 $K_B^a \pmod p$, B가 $K_A^b \pmod p$ 를 계산하여 서로 (㉣)라는 공통의 키를 공유하게 된다.

- | | | |
|-----------------|-----------------|--------------------|
| ㉠ $g^a \pmod p$ | ㉡ $g^b \pmod p$ | ㉢ $p^{ab} \pmod g$ |
| ㉠ $g^a \pmod p$ | ㉡ $g^b \pmod p$ | ㉢ $g^{ab} \pmod p$ |
| ㉠ $p^a \pmod g$ | ㉡ $p^b \pmod g$ | ㉢ $p^{ab} \pmod g$ |
| ㉠ $p^a \pmod g$ | ㉡ $p^b \pmod g$ | ㉢ $g^{ab} \pmod p$ |

- 전자 서명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위조 불가(Unforgeable) : 합법적인 서명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전자 문서에 대한 전자 서명을 생성할 수 없어야 한다.
 - 변경 불가(Unalterable) :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 재사용 불가(Not Reusable) : 전자 문서의 서명은 다른 전자 문서의 서명으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
 - 부인 방지(Non-Repudiation) : 누구든지 전자 서명의 서명자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음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공개키 기반 구조는 대칭키 암호시스템에 기초하여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이다.
 - 정책 인증 기관(Policy Certification Authority)은 공개키 기반 구조 전반에 사용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기관이다.
 - 등록 기관(Registration Authority)은 공개키 기반 구조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사용자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공개키 인증서를 발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인증서에는 버전,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11. 다음 중 강제적 접근 제어(MAC : Mandatory Access Contr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유닉스(UNIX) 운영체제의 기본 접근제어 방식에 적용되었다.
 나. 최초 객체에 설정된 강제적 접근 제어 관계는 복사된 객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부여된 역할에 기반하여 접근이 제어되므로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된다.
 라. 강제적 접근 제어의 대표적인 구현 형태는 ACL(Active Control List)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다음 중 커버로스(Kerberos) 인증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커버로스는 개방형 분산 통신망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 인증을 지원하는 인증 프로토콜이다.
 나. 커버로스를 통해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다. 커버로스는 타임 스탬프(Time Stamp)를 이용하므로 다른 사람이 티켓을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라. 커버로스는 세사미(SESAME)의 기능을 확장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일회용 패스워드(One Time Password)의 생성 및 인증 방식 중 시간 동기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OTP 생성 매체와 인증 서버의 시간 정보가 동기화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일정 시간 이상 인증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비밀번호 생성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③ 질의응답 방식보다 사용은 간편하지만, 호환성이 낮다.
- ④ RSA사에서 만든 Secure ID가 대표적이다.

14. 버퍼 오버플로우(Buffer Overflow)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변수 타입과 그 타입에 허용되는 연산들에 대해 강력한 표기법을 제공하는 고급 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
- ② gets(), scanf(), strcat() 함수 사용을 자제하고 fgets(), fscanf(), strcpy() 함수 사용을 권장한다.
- ③ 스택 배치를 랜덤하게 설정하고 프로그램 실행 시마다 다른 주소에 배치한다.
- ④ 스택상에 있는 공격자의 코드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한다.

15. 유닉스(Unix) 운영체제에서 명령어 'chmod 752 test.c'를 실행한 파일의 접근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① group 권한 : 읽기(X) 쓰기(O) 실행(X)
- ② user 권한 : 읽기(O) 쓰기(O) 실행(O)
- ③ group 권한 : 읽기(O) 쓰기(O) 실행(O)
- ④ user 권한 : 읽기(O) 쓰기(X) 실행(O)

16. 다음에서 설명하는 윈도우 인증의 구성 요소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사용자의 계정과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사용자에게 고유의 SID(Security Identifier)를 부여한다.
- SID에 기반을 두어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대한 접근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생성한다.

- ① LSA(Local Security Authority)
- ② SRM(Security Reference Monitor)
- ③ SAM(Security Account Manager)
- ④ SSH(Secure Shell)

17. 유닉스(Unix)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etc 디렉터리에는 시스템의 환경 설정 및 주요 설정 파일이 있다.
- ② pacct는 시스템에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가 로그아웃할 때까지 수행한 프로그램 정보와 관련된 로그 파일이다.
- ③ 파일시스템의 i-Node는 파일의 유형, 파일 수정시각, 파일의 이름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④ SetUID가 설정된 파일은 실행되는 동안 파일 소유자의 권한으로 실행된다.

18. 방화벽(Firewall)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패킷 필터링(Packet Filtering) 방화벽은 패킷을 조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므로 동작 방식이 간단하여 구현하기 쉽다.
 나. 스테이트풀 패킷 검사(Stateful Packet Inspection) 방화벽은 종단-대-종단 TCP 연결을 허용하지 않고, 두 개의 TCP 연결을 설정한다.
 다. 회로 레벨 프록시(Circuit Level Proxy) 방화벽은 TCP 순서번호를 추적하므로 순서번호를 이용한 세션 하이재킹과 같은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라.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Application Gateway) 방화벽은 프록시 서버를 통해 외부 네트워크와의 직접적인 연결을 피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침입탐지시스템(ID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침입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탐지대상으로부터 생성되는 로그를 제공한다.
- ② Host-IDS는 운영체제에 독립적이다.
- ③ 오용 침입탐지 기법은 오탐률(False Positive)이 높다.
- ④ '침입분석 및 탐지 → 데이터수집 → 데이터 가공 및 축약 → 보고 및 대응'의 단계로 실행된다.

20. 가상사설망(VP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공중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사설 네트워크와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 ② VPN에 사용되는 터널링(Tunneling)은 터미널이 형성되는 양 호스트 사이에 전송되는 패킷을 추가 헤더 값으로 인캡슐화하는 기술이다.
- ③ L2F(Layer2 Forwarding)는 PPTP(Point-to-Point Tunneling Protocol)와 L2TP(Layer2 Tunneling Protocol)를 결합한 방식이다.
- ④ VPN은 데이터 암호화, 접근제어 등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30. 다음 웹 서비스 공격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가) 공격자가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를 저장하여 피해자가 해당 글을 읽을 경우 악성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하는 공격 기법
 (나) 공격자가 입력 폼 및 URL 입력란에 SQL 문을 삽입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조작하는 공격 기법
 (다) 공격자가 의도한 웹사이트 사용행위를 사용자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특정 웹사이트에 요청하게 만드는 공격 기법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XSS | SQL Injection | XXE |
| ② | XSS | SQL Injection | CSRF |
| ③ | XXE | SQL Injection | CSRF |
| ④ | XXE | CSRF | XSS |

31. 블록체인(Block Chai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비트코인에서 최초로 구현되었다.
 나. 블록체인의 한 블록에는 앞의 블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작업 증명이나 지분 증명 등과 같은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라. 제네시스 블록(Genesis block)은 블록체인의 가장 첫 번째 블록을 말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원칙 중 '무결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증거자료는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재현이 가능해야 한다.
 ② 컴퓨터 내부의 정보 획득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증거가 획득되고 이송, 보관, 분석, 법정 제출 등의 과정이 명확해야 한다.
 ④ 획득된 정보는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3. 다음 중 ISO 27001:2013의 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① 정보보호 조직(Organiz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② 운영 보안(Operations security)
 ③ 공급자 관계(Supplier relationship)
 ④ 모니터링과 검토(Monitoring and review)

34. 위험이 존재하는 프로세스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정보보호의 위험처리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위험 회피 ② 위험 감소
 ③ 위험 전가 ④ 위험 수용

35.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이버 위기 경보의 단계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침해 사고가 다수 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 복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망/기간망의 장애 또는 마비

- ① 관심 ② 주의 ③ 경계 ④ 심각

36.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②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37.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④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39. 다음 빈칸에 들어갈 대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국가정보원장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장

4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